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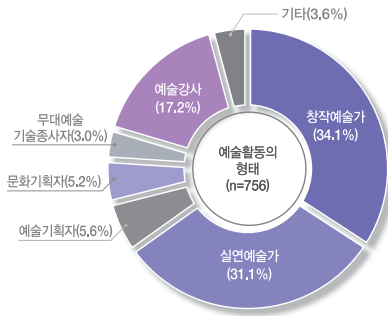
# 대전지역 예술인의 실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 01 예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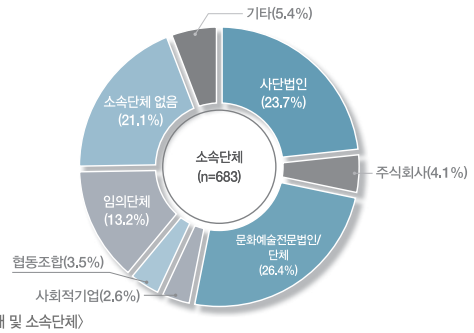
### 대전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개요

조사 방법	개별 면접조사 +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대전광역시 거주 문화예술 전문가(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표본 크기	유효표본 572명
표본 추출	다단계 층화추출법과 눈덩이 표집을 혼합 적용(장르별 비례 층화)

- 대전지역 예술인은 대부분 창작예술과 실연예술 종사자가 많고, 문화 예술법인 / 단체 소속인이 대부분이지만, 소속단체가 없는 예술인 비율도 많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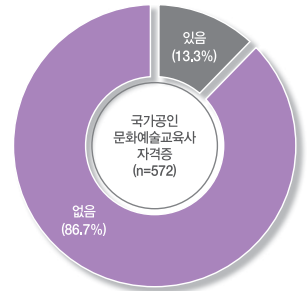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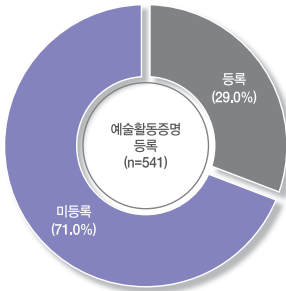


- 창작예술가 - 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작가, 감독 등
- 실연예술가 - 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 예술기획자 - 큐레이터, 학예사, 공연/전시기획자 등



- 문화기획자 - 커뮤니티, 문화사업 기획자 등
- 무대예술 기술 종사자 - 촬영, 음향, 조명, 의상 등
- 예술강사 - 학교,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서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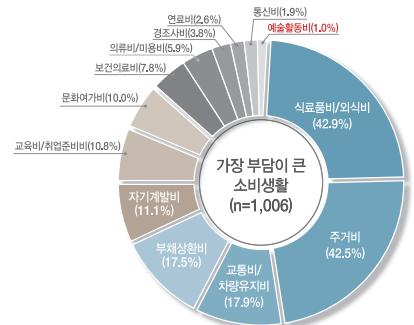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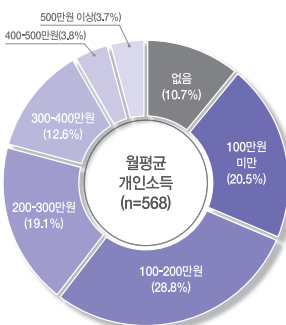
- 예술활동을 토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예술활동 증명 등록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획득 비율이 낮아 개선이 시급



〈예술활동증명 등록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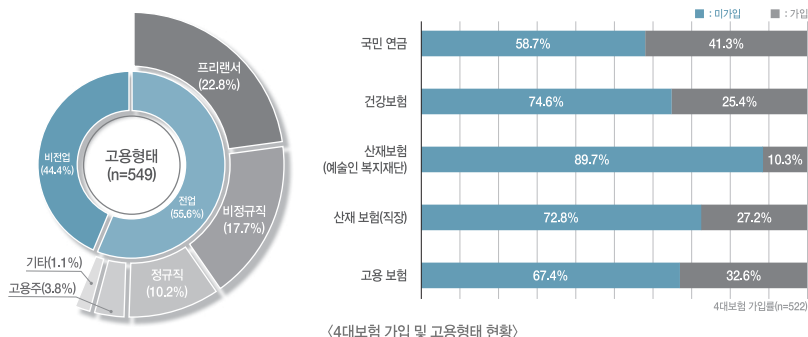
## 02 경제 실태

-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비율이 전체의 60.0%에 이르고 있으며,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대부분 소비를 하는 와중에 예술활동을 위한 소비는 매우 적은 비중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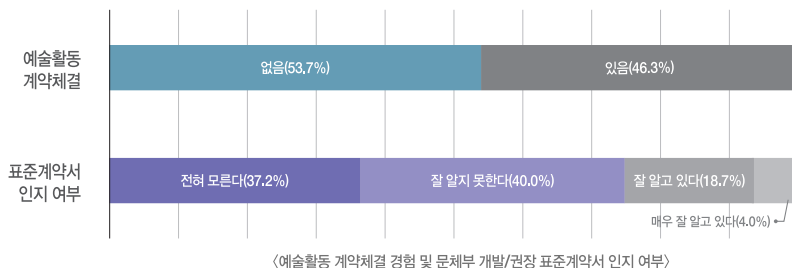
〈월평균 개인소득 및 가장 부담이 큰 소비생활〉

- 비전업 예술인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우며, 전업 예술인도 프리랜서가 다수
-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4대보험 가입 및 고용형태 현황〉

- 예술 활동시 계약 체결 비율이 낮으며, 문체부가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예술인이 대다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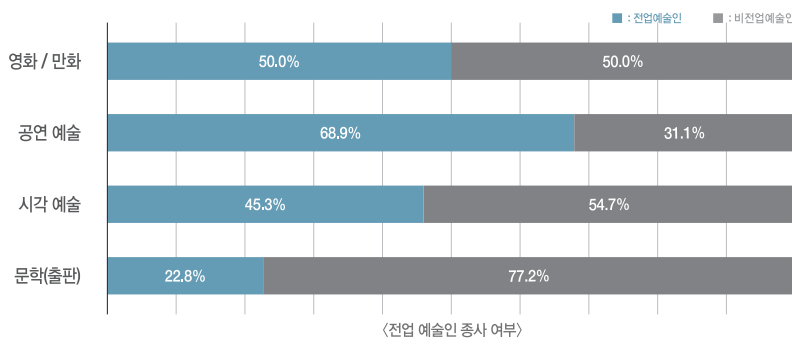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및 문체부 개발/권장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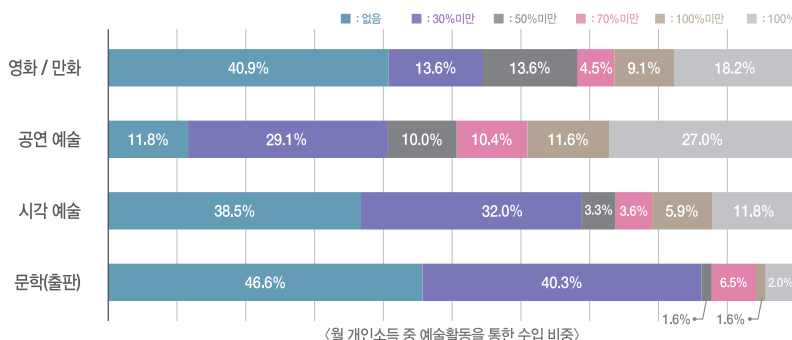
### 03

## 예술활동 분야별 차이

- 예술 장르별로 구분할 때, 공연예술 분야가 전업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문학 분야가 전업 비율이 낮음
-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중도 공연예술 분야가 두드러짐



〈전업 예술인 종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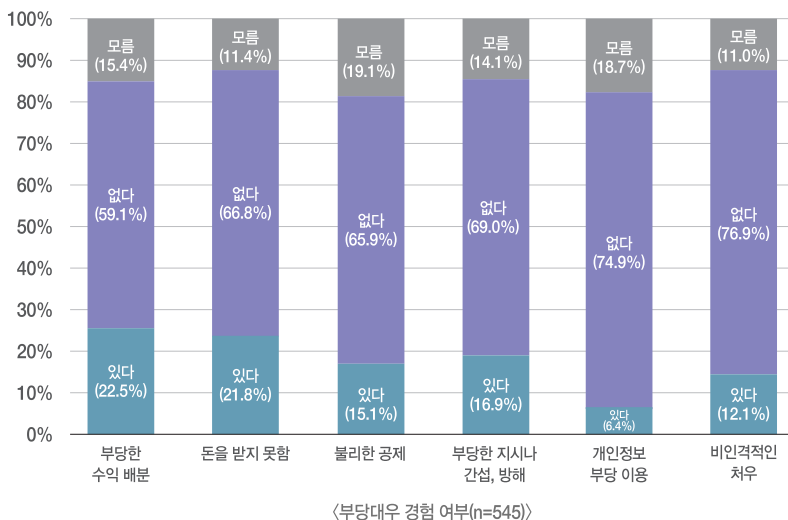


〈월 개인소득 중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비중〉

### 04

## 불공정/부당행위 실태

- 대전지역 예술인들은 부당대우를 당한 경험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수익 배분이나 창작활동의 대가에 관한 부당대우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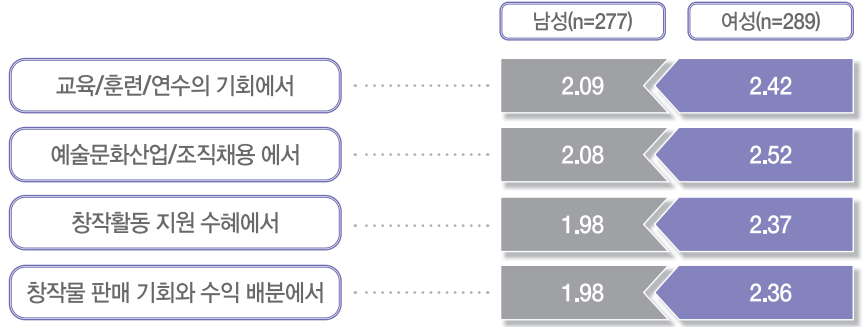


〈부당대우 경험 여부(n=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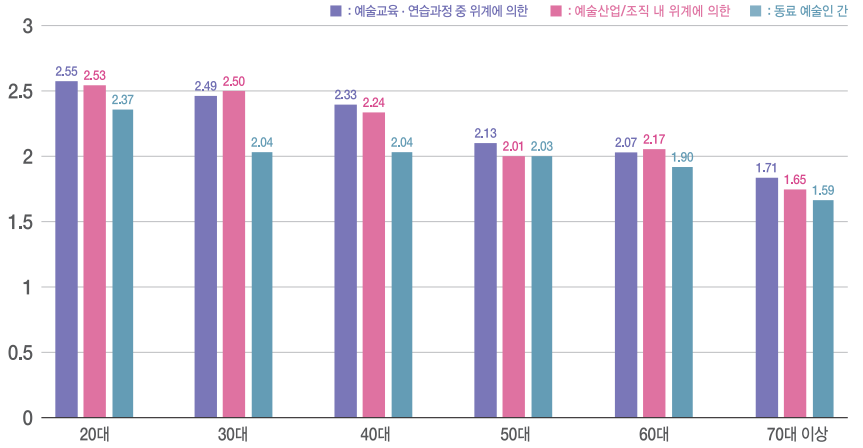
-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와 성폭력피해 신고 상담센터는 대다수가 알고 있지 않아 홍보가 필요함

# 05 불공정/부당행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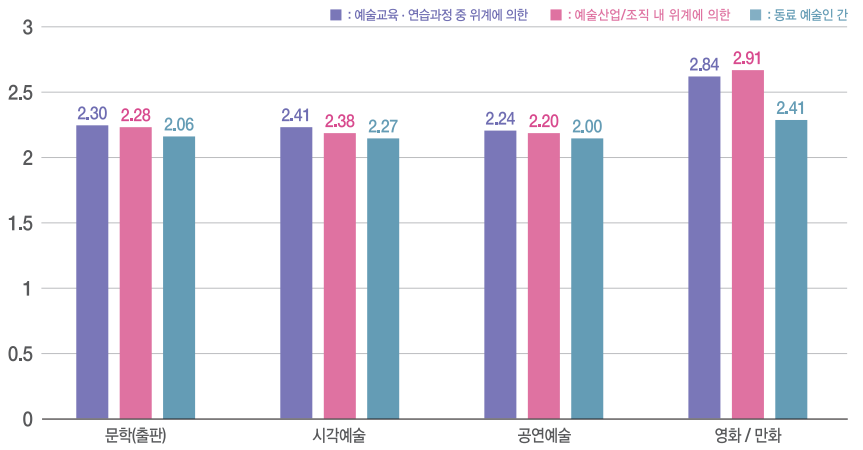
• 예술계 내부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활동분야별로는 영화 / 만화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술계 내부 여성차별 실태에 관한 인식(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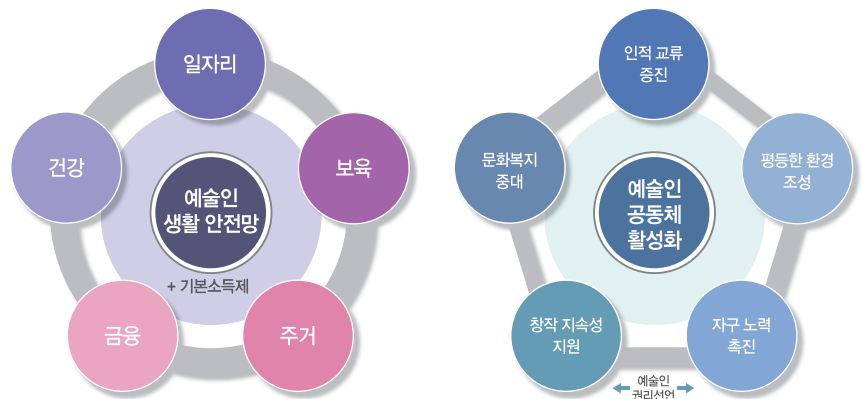
〈예술계 내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인식(연령대별)〉



〈예술계 내부 성폭력 실태에 관한 인식(활동분야별)〉

# 06 정책 제언

- 현재 예술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향적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생태계가 매우 취약하며 대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 필요함
  -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필수 선결조건이며, 대전예술인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지원 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함
- 예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예술인을 노동자로서 바라보며 예술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 확보뿐만 아니라 예술인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예술복지 증진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함



\*자료출처: 한상현(2020), 「2019 대전 예술인 복지 정책, 대전세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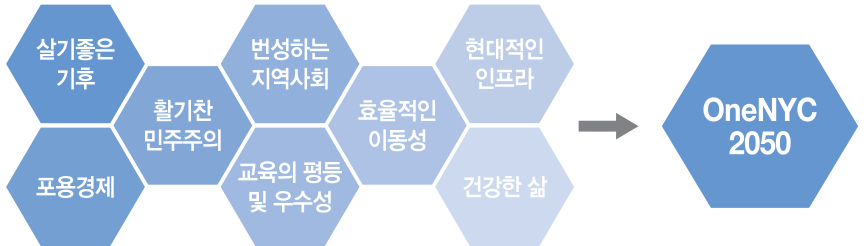
# 국내 및 해외 도시동향

## 01 그린 뉴딜 정책

- 그린 뉴딜정책이란?
  -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 및 고용 촉진
  -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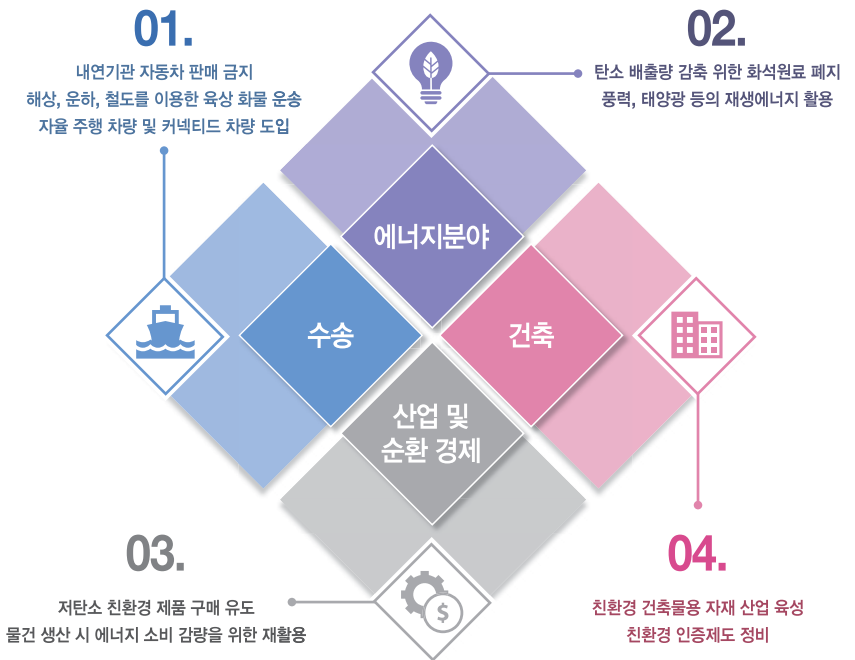
## 02 국외 사례

- 뉴욕시의 'OneNY 2050'
  - 주거 부담, 경제 불안, 불평등, 기후변화, 낡은 인프라의 문제를 안고 있는 뉴욕시
  - 유색인종, 이주민 등이 겪는 불평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정의 구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 '기후변화'와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해소, 포용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합의, '그린뉴딜'을 제시
  - 뉴욕시는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 성장성, 공정성, 다양성-포용성을 핵심가치로 선정
  -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8개의 전략 목표와 30개의 세부전략을 제시



\*출처 : 국토연구원(2019), 뉴욕시의 그린뉴딜정책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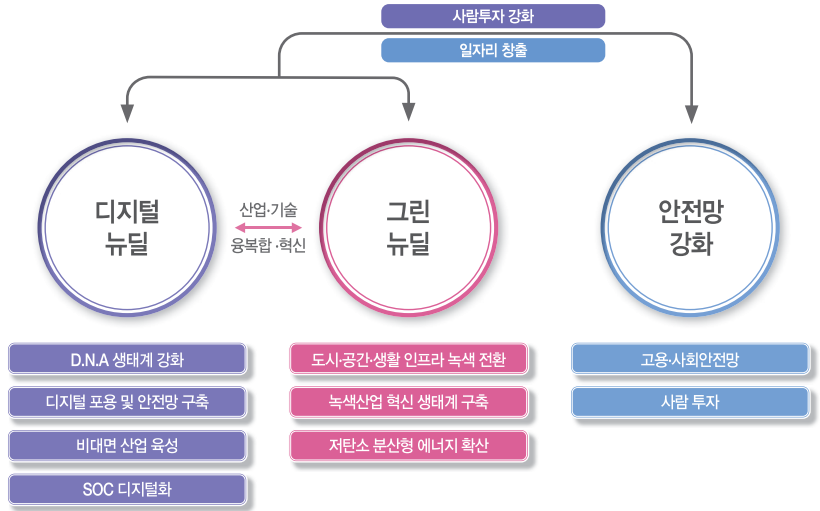
- '유럽의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을 시작
  -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 규모는 61% 성장,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소
  - 에너지, 수송, 건축, 산업 및 순환 경제 등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정책 제시
  - 4개의 분야 모두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
  - 유럽그린딜 정책에 따른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출처 : 한국에너지정부문화재단(2020)

● 한국판 뉴딜 정책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분
- 디지털 뉴딜 :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및 비대면 의료·교육 육성
- 그린 뉴딜 :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공공시설 확충
- 안전망 강화 :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격차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 대전형 뉴딜정책

- 대전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과학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형 뉴딜을 추진
-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13조 2,000억원을 투자해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신규사업 47개를 연계 발굴해 총 100대 과제를 재편
-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
-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하여 바이오산업, ICT·AI, 소재·부품·장비의 세 가지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 최초의 트램 건설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를 확충하는 등 SOC 확충을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13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전의 산업생태계 재편”

-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
- 5G·IoT 기반 무선통신융합산업 및 드론산업 특구 지정
- 지역 기업 생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스마트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사업”

- 트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확대, 시내버스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
- 그린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제로 도시 구현
- 갑천 등 3대 하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통한 친환경 그린시티 조성



“SOC 확충으로 건설 경기도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확대”

- 고용유지 협약 확대
- 기업맞춤형 디지털 인재양성
- 디지털 역량센터 확산을 통한 미래공통체 확장



“대전과 세종이 200만 명을 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성장”

- 충청권 실리코밸리 조성
- 대전~세종~청주 광역급행철도 건설
-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 개발

\*출처 : 대전광역시